

강남구,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제16주기 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을 연다. 주민, 학생, 보훈단체, 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 55인의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린다. 강남구는 서해 수호 용사 55인 가운데 한 명인 故 한주호 준위의 묘소가 수도전기공업

고등학교라는 인연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매년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故 한주호 준위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 장병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순직했다.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끝까지 바다로 들어갔던 그의 선택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군인의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일깨우고 있다. 강남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곧 서해를 지킨 모든 영웅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뜻을 담아 올해도 추모와 기념의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는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까지

故 한주호 준위 동상 앞에서 열리는 추모식으로 시작한다. 참석자들은 헌화과 분향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묵념으로 감사와 추모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교내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념식과 추모식은 서해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라며 "국민들과 함께 영웅의 이름을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가 지 이어갈 수 있도록 강남구도 그 뜻을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등포구 '주목'...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성과 입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운영질향 예방을 위한 상호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

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쉼터 1, 2호점 모두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쉼터 1호점과 영등포문화라운지 '따따' 앞에는 생수 자판기를, 쉼터 2호점에는 전용 냉장고를 설치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에만 2,325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형 통합돌봄' 준비 만반... 서울시, 돌봄모델을 선도

통합돌봄 시행,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들어가... 제도 안착 전방위 지원

작년 시범사업, 올 초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돌봄자원 효율적 배분 위한 D/B 구축

오는 27일(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일(수)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오는 '30년까지 7,000개소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62개소에서 장기요양 확대, 요양병원 퇴원 환자도 집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공공증을 해결해 주고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1668-0120)를 운영한다.

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또 시행 초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동행센터의 돌봄매니저, 복지플래너 배치 등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통합돌봄 비 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 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준비해 온 '서울형 통합돌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 계획(26~30)'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돌봄SOS서비스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 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 5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 돌봄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취지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고독사 예방 '지역이 답'...동대문형 복지모델 추진 본격화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권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단위 협력 기반의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되는 고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동(洞) 단위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연계체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구는 19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5개 동 주민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기관장과 동장이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 공유와 협약 내용 안내를 거쳐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협약식은 기념촬영을 끝

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1동, 청량리동 등 5개 동 주민센터는 향후 1년간(2026년 3월~2027년 2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 운영 기반 마련 ▲고립위기 가구 발굴 및 정보 공유 ▲위기가구 통합 지원과 공간 연계 ▲주민 주도의 마을돌봄체계 활성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 유아차 런' 28일(토) 개최...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교통통제

'2026 서울 유아차 런' 28일 오전 7시30분~12시(출발 8시 반)... 5천 가족 참가

'2026 서울 유아차 런(Run)'이 오는 28일(토)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유아차를 탄 영유아부터 부모와 함께 걷고 뛰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까지, 아이가 있는 5,000가족이 서울 도심에 함께 누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약 5,000가족, 20,000여 명이 참가하며, 우리은행이 행사 후원에 함께한다.

'2026 서울 유아차 런(Run)'은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정오)까지 진행되며, 8시 30분 토끼반 출발을 시작으로 거북이반, 유아차 졸업반 순으로 출발한다.

코스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 송례문을 지나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가로질러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8km 구간으로, 서울 도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다.

'서울 유아차 런'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도심 가족 축제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대표 상징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즐거움을 확산하고, 가족이 함께 도심에 누비며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육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서울시의 양육친화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아동 및 영유아 가족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구급차 5대 및 의료진(의사+간호사) 2팀, 코스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안전요원 186명 및 모범운전자 300명, 행사 운영요원 101명, 자원봉사자 50명 등 운영인력 총 637명

을 전 구간에 배치해 현장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우천·강풍·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질 변화에 대비해 행사장 시설물 관리, 참가자 안전 확보 등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발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앞당겨 진행하며,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오전 6시부터 12시(정오)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시는 대회 당일 교통통제에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휴일 교통량 및 대회 상황을 고려해 구간별로 전면 또는 부분 통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카카오페이와 T맵, 네이버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을 통해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정성 기자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집주소만 입력 '시진단' 해준다

서울 임대차계약 예정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최대 2회 이용해 계약 전 주택 위험도 비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25일(수)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천 명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

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세 배 확대해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 준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한 것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 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들이 불안해하는 다 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취약했으나, 이를 빅데이터 AI 기반 분석으로 보완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양측 정보를 상호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 12개 항목은 그대로 확인 가능하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개된 임대인 정보를 제외한 항목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한 임대인에 한해 임차인 정보 7중 조치가 가능하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이정성 기자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기회 개최

2026. 4. 3. (금) 10일간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